

MRI·초음파 필요대만 건보... '文케어' 폐기

의료적 필요도 등 필수 항목 설정해 제한적 급여

"보장성 후퇴 아냐...보험 재정 남용 막자는 취지"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 과다요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항목에 의학적 근거를 대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20조2000억원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번 방안에는 ▲자기 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검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 단기 내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포함됐다.

먼저 급여화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서 필수 항목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를 후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되 불필요한 검사, 필요하

지 않은 부분을 점검하고 명확한 급여기준을 제시해 보험 재정이 남용되는 상황이 없도록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급여 기준 개선은 향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일정 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으면 업체가 약가의 일부를 환급하는 위험분담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적용해 고가의 약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 방식을 개선한다.

장기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 환자 1인당 사용 한도 초과 시 초과분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등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1년간 입원과 투약을 제외 한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를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기준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이용자는 약 2500명이다.

현재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이 30~60% 수준인데 이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단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일 하루에 1번씩 병원을 가는 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며 "365회 이상 외래 이용자를 보면 대부분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주로 물리치료, 통증치료가 많은데 과다하게, 습관적으로 병원을 가는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이나 중증·희귀 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을 낮추는 산정특례 제도는 일부 중증질환에 대해 제외하는 등 적용 범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민주화보상 심의위원 임명



행정안전부는 13일 김영집(59)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위원회 위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대법원장 등이 추천한 각 3인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상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밖에 민주화보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심의한다.

김 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野, 윤 대통령에 "김경수 사면 복권 동시 추진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끼워넣기' 하려한다는 지적이다.

박종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 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 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보유했다.



해양폐기물로 만든 재활용품 전시회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폐기물 재활용 전시회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해양폐기물로 만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野 "국조 복귀하라" vs 與 "예산 통과 후 판단"

야 3당, 미북귀시 개문발차 선언 "즉각 특위 복귀 촉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13일 미북귀시 개문발차를 선언하고 나섰다.

야3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촉구한다"며 "오늘 중으로 국조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조조사 임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조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조조사 기간을 45일로 줄

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야3당 위원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청문회 증인 채택과 조사대상기관 현장조사, 자료제출 관련 협조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유가족과 생존자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여야 합의에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물론 행안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규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제시하는 국조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책임을 돌린 바 있다.

그는 "저희 국조특위 위원들이 제게 사퇴의사를 표시해왔고 사퇴사유는 제대로 된 국조조사가 되기 어렵고 민주당이 국조조사를 정쟁이나 정략에 활용하려는 게 이유"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민주당과 국조조사 합의할 때 예산안 통과 이후 국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예산 통과 자체가 불명확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예산 통과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국정조사 내용을, 청문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공세로 책임 뒤집어씌우기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

내일 광주·전남체육회장 선거...투표인단 신분증 지참·시간 확인

광주 오후 2시~5시·전남 오후 2시~4시30분

광주와 전남체육회장선거가 이를 앞둔 다다음 가운데 체육회별로 투표시간이 달라 선거인단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광주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광주와 전남체육회장 선거가 각각 빛고을체육관, 전남체육회관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후보당 10분 내외의 소견 발표 후 곧바로 실시되며 광주의 경우 오후 2시~5시, 전남은 오후 2시~4시 30분 사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도체육회를 뽑는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광주 429명, 전남 354명으로 구성됐다.

선거인단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면 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인의 실수인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며 투표용지를 활용해서도 안된다.

개표는 투표 당일 진행되며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개표결과를 인계받아 당선인을 결정한다.

당선인 정보, 투표율 및 개표결과는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 광주체육회장은 박찬모·전갑수 후보(기호 순)가 경합을 펼치고 있다. 전남은 윤보선·송진호·장세일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끝난 뒤 오는 22일에는 각 자치구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되며 선관위가 위탁 관리한다. /김도기 기자

'곰이·송강' 품은 강기정 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광주 방문건의

文 "한 번 가겠다" 감사 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품종 개 '곰이'(암)와 '송강'(수)을 품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문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문 전 대통령께 전화드렸다. 통화 과정에 광주 방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전남 오전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에 새 보급자리를 뜬 '곰이'와 '송강'을 찾아 가기도 했다. 강 시장은 청와대 대입 시절 '곰이'·'송강'과 인연을 쌓았다. 전남 우치동물원 언론공개 행사에서 '곰

이', '송강'의 이름표가 바뀐 사실도 먼저 알아줬을 정도다.

강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을 맡아줘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씀과 '겸사겸사 한번(광주에) 가겠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전했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와대에 선물로 보내 온 품종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소유이며 대통령기록물인 품종개들을 퇴임 뒤에도 맡아 길러왔지만, 정부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지난 달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다. /김도기 기자

0세 아이 월 70만원...부모급여 내년부터

1월1일부터 지급...0세 70만원·1세 35만원

정부가 내년에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양성제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련 학위가 없어도 일정 수준의 학점을 따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둑하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내년 1월 혜택을 받는 대상은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은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한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이병훈·조오섭·이형석, 민주 국감 우수의원



이병훈·조오섭·이형석 의원

제시해 호평받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 의원은 혁신이란 가면 뒤에 숨겨놓은 구조조정 칼바람, 비정규직 양산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실체를 벗겨냈고 건설사고 재해율이 시공능력 평가에 제외되는 문제와

이병훈·조오섭·이형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은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윤석열차' 사건으로 불거진 문화예술분야 검열 의혹과 청와대 개방·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의혹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문화도시 지정 공모 과정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소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 분회수방안 등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출해 대안 마련을 시도해 마

내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주간의 민성적 정체 문제를 제기하며 10년 만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나란히 3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광주 북)은 민생·정책·국민국감을 앞세워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매섭게 추궁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도기 기자

호매민평

이태원

왜곡
그정부에그니름

5.18?

*북한군개입
*헬기사격허위
*자파준동-파시즘XX
*은정부
*진실파헤치기광동

민중일시농업-518단체
내거피해회원장추고
고정동
그럼
험험

태헌